

[서식 예] 손해배상(기)청구의 소 (굴착공사로 가옥, 벽 등의 균열)

##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 손해배상(기)청구의 소

###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청 구 원 인

1. 원고는 ○○시 ○○구 ○○○동 ○○○ 대지상 연화조 스라브위 기와지붕 지상 1,2층 각 126.54평방미터, 지하실 23.04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가옥’이라고 함)

의 소유자이며, 피고는 이 사건 가옥과 인접한 같은동 □□□ 대 298.2평방미터의 소유자입니다.

2. 피고는 2017. 3. 초순경 ○○구청장으로부터 피고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가옥의 지층으로부터 근접한 거리에서 지하굴착공사를 하였고, 이로 인해 이 사건 가옥의 담장이 약 10내지 12미터 가량 붕괴되었으며, 위 담장과 그 가옥 사이의 폭 약 1미터의 시멘트바닥이 약 10센티미터 침하되면서 그 건물의 내, 외벽 및 바닥에 수많은 균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3. 피고는 위와 같은 지하굴착작업을 시행하게 되면 지하수 및 토사가 유출되거나 진동이 발생되고 이에 따른 인접지반의 교란에 의한 진동으로 인하여 인접지 건물에 균열을 발생시키거나 심한 경우에는 붕괴에 이르게 할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굴토면에 콘크리트 기둥을 설치하는 □□공법을 사용하여 지하 약 4미터 깊이로 굴토공사를 강행하였고, 이로 인해 이 사건 가옥에 위와 같이 균열 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4. 이와 같은 피고의 위 지하굴착공사로 인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가옥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파손, 균열되었고, 이로 인해 원고에게 이 사건 가옥에 대한 보수 등 공사비로 ○○원이 소요됩니다.
5.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손해배상금 ○○원 및 이에 대하여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 입 증 방 법

- |           |           |
|-----------|-----------|
| 1. 갑 제1호증 | 사진        |
| 1. 갑 제2호증 | 현장약도      |
| 1. 갑 제3호증 | 공사비용(견적서) |

## 첨 부 서 류

- |                 |      |
|-----------------|------|
| 1. 위 입증방법       | 각 1통 |
| 1.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1통   |
| 1. 토지대장등본       | 1통   |



1. 소장 부분 1통

1. 송달료 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기간 제척기간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분 제출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li> <li>·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li> </ul>		
불복절차 및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li> <li>·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li> </ul>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된 경우 그 손해는 수리가 가능하면 그 수리비가, 수리가 불가능하면 그 교환가치의 감소가 통상의 손해에 해당하므로 지하굴착공사로 건물이 파손, 균열됨에 따른 재산상 손해로 보수 등 공사비와 아울러 구하는 그 보수 후 건물의 교환가치 감소액 상당의 손해는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라 할 것임(대법원 1991. 6. 11. 선고 90다20206 판결)</li> </ul>		

지연손해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에서는 ①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을 선고할 경우에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 부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현재는 연 12%임)에 의하고(다만,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②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선언하는 사실심판결이 선고되기까지 그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상당한 범위 안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li> <li>· 그런데 위 법조항의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채무자가 위와 같이 항쟁함이 상당한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그 평가에 관한 문제라고 할 것이고, 한편 「그 상당한 범위」는 「채무자가 항쟁함에 상당한 기간의 범위」를 뜻하는 것으로서 채무자가 당해 사건의 사실심(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항쟁할 수 있는 기간은 「사실심판결선고시」까지로 보아야 하므로, 그 선고시 이후에는 어떤 이유로든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으나,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그 심급의 판결선고 전이기만 하면 법원은 그 항쟁함에 상당한 기간의 범위를 적절히 정할 수 있음(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02 판결).</li> <li>· 따라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 있어서도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발생시부터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청구해볼 수 있을 것이나, 피고가 그 의무 및 존부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손해발생시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부담하라고 선고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소제기시에 지연손해금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발생시부터 판결선고시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청구하기도 함.</li> </ul>
-------	---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불법행위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행위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3. 따라서 위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사고발생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